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조태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본고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최빈수원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가교 역할은 외교적 수사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들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노력에 교훈과 영감을 주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겸손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은 반드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측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교 역할에 걸맞게 정립하여 언행이 일치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양측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여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성공담만 남발하여 개도국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실패담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우리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목 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 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도약
 - 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황('00~'09)과 문제점
3.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
 - 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
 - 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계획
4.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방안
 - 가.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나. '가교' 역할에 걸맞은 분명한 견해와 목소리
 - 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권고를 준수하는 개발협력
 - 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마. '성공담과 실패담'을 동시에 공유하는 겸손한 개발협력
5. 결론

1. 서론

- 본고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개도국 간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 수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작년에는 선진 공여국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에 이어 G20 개발의제 도입을 주도하였고, 올해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개발협력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국제사회는 '수원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발 경험에 주목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에 상당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 스스로도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 단순히 우리의 성공적 개발 경험을 강조하고 우리의 '잘한 점'만을 부각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음. 선진·개도국 간 진정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도약

1)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

- 1953년 6·25 전쟁 종전 직후 우리나라는 1인당 GDP 67달러의 최빈

국이었으며, 전후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였음.

- 광복 이후 1999년까지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였음.
 - 기술, 자본재,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조를 받았으며, 채무구제(debt cancellation)가 없는 것이 특징임.
- 강한 발전의지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후 복구 및 경제·사회 개발에 해외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함.
 -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에 대외 원조를 집중 활용하여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
 -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8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상회함.
 - ※ 한국의 경제변화: GDP 13억 달러(‘53년) → 1조143억 달러(‘10년 잠정), 1인당 GDP 67달러(‘53년) → 20,759달러(‘10년 잠정).
 -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수원국으로서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최빈개도국 출신 국가로서는 최초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
 - 우리나라는 원조의 덫(aid trap)을 피해 원조를 경제 사회 개발의 촉진제(catalyst)로 활용하여 원조를 탈출(exit from aid)한 모범 사례임.

2)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대외 원조 규모는 약 69억 달러(OECD 공식 통계)이며, 2010년에도 약 12억 달러(OECD 잠정 통계)의 대외 원조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됨.
 - 총 대외 원조의 약 68%가 아시아에 집중됨.
-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역사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자금으로 개도국 초청연수를 실시한 데서 시작하며, 70년대는 주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우방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연수를 실시함.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창설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립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였고, 90년대부터 대외 원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함.
 - '03년 이후에는 이라크와 아프간 지원,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수원국으로서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최빈개도국 출신 국가로서는 최초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우리나라는 원조의 덫(aid trap)을 피해 원조를 경제 사회 개발의 촉진제(catalyst)로 활용하여 원조를 탈출(exit from aid)한 모범 사례

**짧은 기간 내
국제사회에 기여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 규모,
추진 체제, 효과성
측면에서 국제사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 국가 및
국제기구에 많은 사업을
지원한 결과, 사업의
분절화·파편화
현상으로 원조 효과성도
낮은 상황 초래**

Development Bank: MDB) 출자 증액 등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격히 증가함. '05~'11년간 정부 총 예산이 연평균 8.17%(208.7조 원 → 309.1조 원) 증가한 데 비해, ODA 예산은 연평균 15.4% 증가함(7,971억 원 → 16,445억 원).

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황('00~'09)과 문제점

- '00~'09년간 총 원조 규모는 51억 달러 상당이며, 연도별 원조 규모는 '00년 2.1억 달러에서 '09년 8.2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함.
-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문서 없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실시해 옴.
 - 무상 원조의 경우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 경제·사회발전 증진을(한국국제협력단법), 유상 원조의 경우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대외경제협력 촉진을(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각각 추구함.
-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으로 분절화된 체계 속에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약함.
 - 양자 원조의 경우,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전담하고, 무상 원조는 외교부와 KOICA, 각 부처, 지자체 등 약 30여 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됨.
 - 다자 원조의 경우, 국제금융기구는 기획재정부가 전담하고, 유엔은 외교부, 기타 국제기구는 소관 부처별로 추진함.
- 짧은 시간 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 규모, 추진 체제, 효과성 측면에서 국제사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
 -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 국가 및 국제기구에 많은 사업을 지원한 결과, 사업의 분절화·파편화 현상으로 원조 효과성도 낮은 상황을 초래함.
 - 또한 국가차원의 통합전략 없이 공적개발원조를 다원화된 구조로 추진하여, 중복 및 유사사업이 다수 발생함.
- 이러한 현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기초와 맞물려, 공적개발원조 정책 선진화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킴.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 개발협력 규범 준수 등 선진 원조 체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3.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

-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해 '09년 12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 및 아동의 인권향상과 양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국제개발협력법 제3조)'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이를 토대로 '수원국에게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려고 함.
 - 이는 수원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자립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자부심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특성을 결합한 원조를 실시하려고 함.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하되, 수원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함.
 - 단순한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를 넘어 수원국이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수원국의 입장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함.
 - '배고픈 자에게 단순히 식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같이 해결함으로써 스스로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과거와 같이 산만한 원조가 아니라 국가 전략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체계적인 원조를 실시하려고 함.
 -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 개발이 근간이 되는 인프라 등 하드웨어 개발 원조와 인적자원개발, 기술전수 등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 및 아동의 인권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국제개발 협력법 제3조)'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이를 토대로 '수원국에게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국제 개발협력을 추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특히 ODA/GNI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2010년 기준(잠정통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약 1.2억 달러로서 23개 OECD DAC 회원국 중 18위이며, 특히 ODA/GNI 비율은 약 0.12%로 최하위...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DAC 회원국 평균(0.32%)에 비해 많이 부족

발 원조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킴.

- 진정성을 담은 ‘따뜻한 원조’를 실시하려고 함.
 - 원조를 실시함에 있어, 단기적 이해관계에 매몰되기보다는 수원국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공생·공영, 수원국과의 장기적 우호협력 관계, 나아가 국제사회 주요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중시함.

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계획

1)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특히 ODA/GNI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 2010년 기준(잠정 통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약 1.2억 달러로서 23개 OECD DAC 회원국 중 18위이며, 특히 ODA/GNI 비율은 약 0.12%로 최하위임.
 -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DAC 회원국 평균(0.32%)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02년 ‘몬테레이 유엔 개발자원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공약한 ODA/GNI 비율 0.7%에는 크게 미달함.
-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ODA 달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
 - 양자·다자 원조 간 비율은 7:3 수준으로 유지 예정인바, 이는 OECD DAC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공적개발원조의 유·무상 비율(순지출 기준) 관련, 우리나라는 '09년~'10년간 약 37:63 수준으로 OECD DAC 평균인 약 4:9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기존에 승인된 차관 제공을 비롯한 수원국에 대한 약속 이행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따라가도록 노력 하되, '15년까지는 유·무상 비율을 40:60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임.
- 원조의 구축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추세나 OECD DAC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08년 기준 공적개발원조 비구축성 비율은 약 36%로서(무상 43%, 유상 34%) OECD DAC 평균인 8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비구속성 비율이 불과 4% 수준이었던 '04년에 비해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약 75%까지 단계적으로 제고할 계획임.
- 무상 원조의 경우 '15년까지 100% 비구속성을 달성할 계획이며,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해서는 '12년까지 100% 비구속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2)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한 노력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 없이 유·무상 원조 집행 기관들이 각자의 목표와 전략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특히 무상 원조의 경우 다양한 기관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수 국가와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원조의 중복 및 분절화를 초래하여 원조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이에 따라, 원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수원국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의 지역별 기조와 자원 배분,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가별 지원전략이 유·무상 원조 간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선진적 원조 전략을 수립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원조를 시행하고자 노력 중임.
 - 지역별 자원 배분 관련,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동질감, 점증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 아시아에 대한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지원을 전개함.
 -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6개 중점 협력국가를 선정하여 최소 70% 이상의 지원을 실시함.
 - '12년 말까지 모든 중점 협력국에 대한 유·무상 통합 국별 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임.
 - 사업 발굴, 선정 및 추진 등에 있어 유·무상 주관 기관 간, 개별부처 및 원조집행기관 간 협력도 강화함.
-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해 주요 공여국 및 수원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협력대상국의 국가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주요 협력대상국과의 ODA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ODA 시행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 없이 유·무상 원조 집행 기관들이 각자의 목표와 전략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와... 특히 무상 원조의 경우 다양한 기관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수 국가와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원조의 중복 및 분절화를 초래하여 원조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오는 11월 부산에서는
OECD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개발원조총회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주최할 예정인 바,
부산 총회에는 160여
개국 정부 대표,
70여개 국제기구
수장을 포함,
약 2,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에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는 개발협력’을 추진 중임.

- 공여국 간 원조 조화를 위해 주요 공여국과의 정책 협의도 활성화 중임.
- 무상 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일본, EU, 호주 등과 정례 원조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도 일본, 호주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중임.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베트남 등 주요 협력대상국의 ‘원조 공여국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원조 분업 방안을 모색.

3)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개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OECD DAC 고위급 회의,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유엔의 MDGs 관련 회의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ODA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ODA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임.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 유엔 개발협력포럼 자문위원 수임 등 OECD 및 UN 등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규범 형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기여 중임.
 - 오는 11월 부산에서는 OECD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주최할 예정인 바, 부산 총회에는 160여 개국 정부 대표, 70여개 국제기구 수장을 포함, 약 2,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회의는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등 기존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논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를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공여국-수원국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구도(architecture)를 벗어나 신흥경제국,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comprehensive and inclusive partnership)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주최국으로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여성과 개발’, ‘효과적 국가 및 제도’ 등의 제도를 제안 중임.

- 필자는 금년 6월 우리나라 인사로서는 최초로 유엔 내 국제 개발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개발협력포럼 자문단(Advisory Group of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유엔 개발협력포럼의 활동 전략과 국제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조언 중임.
- 주요 선진국의 저성장 추세, 일부 국가에서의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 등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가 과거와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전통적 개발재원 분야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항공권 1매당 1,000원을 징수하여 빈곤퇴치 등에 사용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기존 혁신적 개발재원을 유지·확대하고, 새로운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도 검토 중임.

4)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OECD DAC 회원국 지위에 걸맞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필요함.
- 현재, 긴급구호 예산 확대, 긴급구호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 한해만도 뉴질랜드 지진 및 일본 대지진, 리비아 사태, 동부 아프리카 지역(Horn of Africa) 가뭄 등에 긴급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였음.
- 일본 대지진 시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고 가장 늦게 철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민간 구호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등 보다 발전된 긴급구호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주요 선진국의 저성장 추세, 일부 국가에서의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 등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가 과거와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전통적 개발재원 분야 논의에도 적극 참여...
항공권 1매당 1,000원을 징수하여 빈곤퇴치 등에 사용하는 국제빈곤퇴치기금 등 기존 혁신적 개발재원을 유지·확대하고, 새로운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도 검토 중**

4.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방안

가.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전후 가난을 극복한 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인색한 시각을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프트파워를 증대할 수 있는 소중한 외교적 자산... 제프리 삭스 (Jeffrey Sachs)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도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ODA의 바람직한 발전모델'이라고 규정

갖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개발협력 증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개발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긴 하나 선진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단지 못 사는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우리의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개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장기적 국익을 창출 가능함.
-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프트파워를 증대할 수 있는 소중한 외교적 자산임.
-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도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ODA의 바람직한 발전모델'이라고 규정함.

나. '가교' 역할에 걸맞은 분명한 견해와 목소리

- '가교' 역할이란 단순한 중간자 역할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고, 양측의 관심과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분명한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 선진·개도국 간 가교로서의 우리나라의 참여와 기여가 다자 프로세스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인식을 끌어낼 수 있도록 남북문제를 다루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전략으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함.
- 개발 이슈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정치, 안보 문제 등 사실상 우리 외교의 글로벌 어젠다에 포함된 거의 모든 이슈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포괄적(cross-cutting) 이슈이므

로 이러한 국제정책이슈에 개발렌즈를 갖다 대고 우리만의 독특한 정치, 경제 발전 경험에 기반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남북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기보다는 단순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이슈에 따라 어느 일방의 입장에 동조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적이 많았음.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침묵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때로는 개도국 입장을 신중히 배려하지 않고 선불리 선진국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다른 개도국들로부터 비판이나 핀잔을 받은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가운데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나라가 G20 개발의제의 도입을 적극 주도한 것은 선진·개도국 간 진정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 드문 사례 중의 하나라고 봄.
 -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및 금융 위기 해결을 목표로 주요 20개국 및 국제기구의 공조와 협력을 위해 출범한 것으로서 논의의 초점이 국가 간 거시경제 정책 조율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개발의제를 도입하는데 일부 회원국들이 미온적으로 반응함.
 - 우리나라는 작년 의장국으로서 G20가 세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최고의 협의체(premier forum for global economic cooperation)로서의 위상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70여 개 G20 비회원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주된 관심사인 개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였음.
 - 개도국의 개발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수요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 회복 및 재균형(rebalancing) 달성이라는 G20의 기본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개도국을 세계 경제의 주요 파트너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그 결과,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을 채택한 바, G20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자립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개도

우리나라는 작년 의장국으로서 G20가 세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최고의 협의체(premier forum for global economic cooperation)로서의 위상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70여 개 G20 비회원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주된 관심사인 개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

**OECD DAC 회원국이
위상에 부합하는 원조
규모를 갖추도록 노력
해야 하며, OECD
DAC의 각종 규범과
권고를 준수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ODA
증액, 무상 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
무상 원조 중복
및 분절화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국의 성장능력 확충에 긴요한 9개의 핵심 의제를 도입하고, 성장의 장애요인(bottlenecks)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G20 개발의제 채택 당시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아프리카 개발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대환영함.

○ G20 개발의제 채택 후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바, 이는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G20의 목표 달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개발 격차 해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이해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조율한 결과임.

- 금년에 G20 개발의제가 개도국 그룹인 G77의 지지 속에 유엔 최빈 개도국회의(UN LDC Summit) 결과문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고 명실상부한 국제 개발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교’ 역할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평가하고 있음을 반증함.

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권고를 준수하는 개발협력

○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바, 타의 모범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규범과 권고는 지키는 것임.

- ‘가교’ 역할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가교로 인정해야 진정한 ‘가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의견과 주장만 내세운다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지 확보 곤란함.

○ OECD DAC 회원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원조 규모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OECD DAC의 각종 규범과 권고를 준수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ODA 증액, 무상 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 무상 원조 중복 및 분절화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개발협력 분야를 넘어, UN의 평화유지 활동, WTO 다자무역 협상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함.

- 편의에 따라 개도국과 선진국 지위를 넘나들며, 단기적 국익에 집착하는 것은 국격을 갖춘 나라로서의 인테그리티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 우리의 글로벌 외교의 당면 과제는 개도국 멘탈리티를 여하히 극복하고 우리의 자화상(self image)과 국제사회에 비친 우리의 모습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줄이고 메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

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개발협력 콘텐츠와 모델을 만들어 비교우위를 구축함으로써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여타 선진 공여국들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경제 규모,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역사와 경험,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원조의 규모를 가지고 선진국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개도국의 개발에 긴요한 분야 중 우리나라만이 독특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및 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야 함. 예를 들면, 교육 부문과 민관 파트너십이 그러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부존자원, 토착 자본 등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개발의 동력으로 삼고, 국가 발전 계획 전반에 교육 정책을 통합시킨 바, 경공업 주도 산업화 시기에는 보편적 초등 교육을, 중화학공업 주도 산업화 시기에는 중·고등교육 확대를 각각 추진하여 단계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성공적 개발 달성함.
 - 민간분야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가치사슬(value chain)을 타고 올라가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개발에 성공함.
-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공 사례가 반드시 다른 국가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발협력 전략은 없다(no one-size-fits-all formula)’는 인식으로 수원국의 사정과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함.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개발협력 콘텐츠와 모델을 만들어 비교우위를 구축함으로써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여타 선진 공여국들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경제 규모,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역사와 경험,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원조의 규모를 가지고 선진국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

선진·개도국 간**가교 역할 수행이****개도국 시절 우리가****이룬 성취와 성공만을****강조하는 것이어서는****안되며, ‘성공담과****실패담’을 함께****공유해야...****‘성공담과 실패담’을****함께 공유함으로써,****개발을 추진 중인****국가가 각기 다양한****단계에서 부딪힐 수****있는 문제들을 극복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도움이 되는 개발협력이****필요**

- 우리와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기반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그대로 이식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마. ‘성공담과 실패담’을 동시에 공유하는 겸손한 개발협력

-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이 개도국 시절 우리가 이룬 성취와 성공만을 강조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성공담과 실패담’을 함께 공유해야 함.
 - ‘성공담과 실패담’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개발을 추진 중인 국가가 각기 다양한 단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의 필요함.
-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정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다른 개도국이 주목할 만한 경험이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면서 겪은 실패와 이후의 부작용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성장에만 중점을 두고 실시한 정부 주도 산업화의 결과로 발생한 △과잉·중복 투자와 비효율 △기업의 도덕적 해이 △환경오염 △과도한 외채 도입 등이 결국 IMF로 이어진 우리의 ‘아픈 역사’는 개도국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함.
- 선진국들이 국제 개발협력이라는 미명으로 다수 개도국들에게 자국의 개발 모델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 등 편협한 국가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성공은 물론 실패까지도 공유하는 ‘겸손한 개발협력’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개도국의 공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진정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5. 결론

-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가 주는 구호물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 모임인 OECD

DAC에 가입하는 등 국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의 주요 행위자로 도약한 것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만한 사건임.

- 아직도 약 8억 명 가까운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류 공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자세로 국제 개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개발 원조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여타 선진 공여국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보며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이 그러한 차별화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함. 이는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만에 최빈수원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임.
-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창출하여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들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노력에 교훈과 영감을 주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과 위상 제고는 물론 소프트파워의 증대를 통해 무형의 중장기적 국익을 늘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봄.
- ‘가교’ 역할은 외교적 수사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해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창의적인 사고와 전략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함.
-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비단 개발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외교의 글로벌 어젠다에 포함된 모든 이슈 하나하나에 그런 목표가 실천계획으로 녹아들어 가야 한다고 봄.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는 핑계로 우리가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와 이슈에 있어

**‘가교’ 역할은 외교적
수사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해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창의적인 사고와
전략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선진·개도국 간**적극적인 가교 역할은****반드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하는 것만은 아님...****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입장을 가교 역할에****결맞게 정립하여 언행이****일치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을 보이고,****양측의 상이한 입장을****조율하여 균형 있는****대안을 제시하는 것도****경제적 지원 못지않게****중요**

서 조차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바, 이제는 우리가 남들에 비해 훨씬 더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

- 선진·개도국 간 적극적인 가교 역할은 반드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님.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교 역할에 결맞게 정립하여 언행이 일치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양측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여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성공담만 남발하여 개도국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실패담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우리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봄.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음으로 다가가는 따뜻하고 겸손한 원조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에 보다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을 것임.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조태열

現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대사.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외무부에 입부하여 주미 대사관 참사관, 지역통상국장,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통상교섭조정관(차관보), 주 스페인 대사 등을 역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WTO 분쟁 패널 의장(재판장)과 유엔개발협력포럼 자문위원으로 피선됨. 1982년부터 1년간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수하였음.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